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통상) 트럼프 행정부, IEEPA 무역화 대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활용 검토 2
-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패소에 대비해 122조의 잠재적 활용 모색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표 5
- (경제) 미국 관세정책과의 연계 속 '25년 4월 수입·소비 동향 및 무역수지 변화 6
- (경제) OECD,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7
- (규제) 미국, 중국산 드론 견제 및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위한 행정명령 추진 8

⚖️ 의회법안 동향

-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등 2건 9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10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1

📅 워싱턴 D.C. 주요일정

6.4(수)	• 5월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S&P final U.S. services PMI)
6.5(목)	• 5월 4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Initial jobless claims)
6.6(금)	• 5월 미국 실업률(U.S. unemployment rate)

◎ 워싱턴 포커스

(통상) 트럼프 행정부, IEEPA 무력화 대비 1974년 무역법 제122조 활용 검토

1. 배경

-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의 위법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본격 검토 중
 - 국제무역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상호 관세가 법률상 위임 범위를 초과했다며 무효 판결 및 시행 중단 명령(5.28)
 -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판결 당일 항소 및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제기,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은 이를 수용해 집행 유예 및 관세 징수 지속 결정(5.29)
 - CAFC는 6.5일까지 원고 측 의견서, 6.9일까지 정부 측 답변서 제출을 명령
 - CIT는 판결문에서 “무역적자 해소 목적의 관세 부과는 IEEPA가 아닌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통하여야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해당 조항의 대체 활용 가능성을 시사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IEEPA가 무력화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122조는 그 중 하나”라고 언급(6.1)
 - 122조는 대통령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15%의 임시 관세 또는 수입쿼터 부과를 하용, IEEPA의 효력 상실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

2. 1974년 무역법 제122조의 법적 근거 및 활용 절차

- 122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위기 발생 시,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임시 관세 부과 및 수입제한 조치를 단독으로 발동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19 U.S.C. §2132)
 - (입법 배경) 1970년대 초 금본위제 붕괴 및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입제한을 통해 달러화 방어와 대외불균형 개선을 목표로 설계

- (발동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조치 가능
 - (1)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악영향 발생
 - (2) 미국 통화(달러)의 급격한 평가절하 방지 필요
 - (3) 국제 협조를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 필요
- (조치 유형) 대통령은 다음 세 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병행 시행 가능
 - (1) 기존 관세율 외 최대 15%까지 임시 추가 관세 부과
 - (2) 품목별 수입량 상한 설정(수입 쿼터)
 - (3) 관세와 수입량 제한을 병행하는 복합 조치
- (시행 절차)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을 통해 조치 즉시 발동 가능,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공식화됨.
 - 시행 시점부터 최대 150일간 효력 유지 가능하며, 이후 연장 또는 영구화하려면 의회의 입법 승인이 필수
- (종료 조건) 대통령 재량으로 조기 철회 또는 수정 가능
- (실제 활용) 법령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관세 부과 목적으로 실제 발동된 사례 없음.

3. 현지 반응

□ 민주당 중심으로 대통령 무역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견제 움직임 확산

- Jimmy Panetta 하원의원(D-CA)은 올해 4월 초 제122조 폐지를 골자로 한 「Reclaim Trade Powers Act」 발의*

* 공동 발의자 : Suzan DelBene(WA), Don Beyer(VA), Brad Schneider(IL), Terri Sewell(AL) 등

- 해당 의원들은 “122조는 금본위제 시대의 국제수지 개념에 바탕을 둔 시대착오적 법령이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라고 비판

□ 입법 및 통상 전문가들은 122조의 자의적 활용이 국내외적으로 다층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122조는 1970년대 세계경제 상황에 맞춰 설계된 수단으로 오늘날 자유 무역 중심의 글로벌 통상 질서와 괴리 존재
- 122조의 활용은 GATT 제12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국제수지 위기 (balance-of-payments difficulties)’ 예외 조항과 해석 상 충돌 가능성
 - GATT 제12조 및 제18조는 WTO 회원국이 국제수지 위기를 겪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일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허용
 - 따라서 미국이 122조를 근거로 보호무역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당 조치가 국제수지 위기 대응임을 WTO에 입증해야 하며, 입증 실패 시 타국의 WTO 제소 및 보복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R48435)를 통해 “122조는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자의적으로 활용될 경우 국내외 신뢰도 저하, 국제무역 규범 훼손, 외교적 갈등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Olivia Kim
▪ 자료원	폴리티코(6.2 , 6.1 , 5.31), 블룸버그(6.2), CRS(4.23), Panetta 하원의원(4.1)



(관세) 트럼프 대통령,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 발표

- (개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발표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의 US Steel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관련 연설에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 발표(피츠버그, 5.30)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25%에는 허점이 있다고 주장, 자국 철강 산업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조치의 필요성 강조 (50% 관세는 6월 4일부로 발효)

- (반응) 철강업계·노동계는 환영, 제조업계는 원가 상승과 경쟁력 저하 우려 제기

- 알루미늄 협회,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 증대를 위한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투자를 위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무역 및 관세 정책의 필요성 강조
- 캔 제조 협회는 “관세 인상은 소비자 비용 인상 및 생산비 상승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완화 요청
- 태평양 연구소(Pacific Research Institute)의 웨인 와인가든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50% 관세 부과에 대한 경제적 근거의 정당성 부족 비판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50% 관세가 미국 철강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저해 초래 및 동맹국들과의 주요 무역협정 위협, 미국 제조업체·소비자들의 가격 상승 초래 경고
- 동 조치에 따른 미국 알루미늄 및 철강 가격 급등으로 미 제조업 생산비 부담 증가 전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폴리티코([5.30](#)), 로이터통신([5.31](#)), PIIE([6.2](#)), 블룸버그([6.2](#)) 등 현지 언론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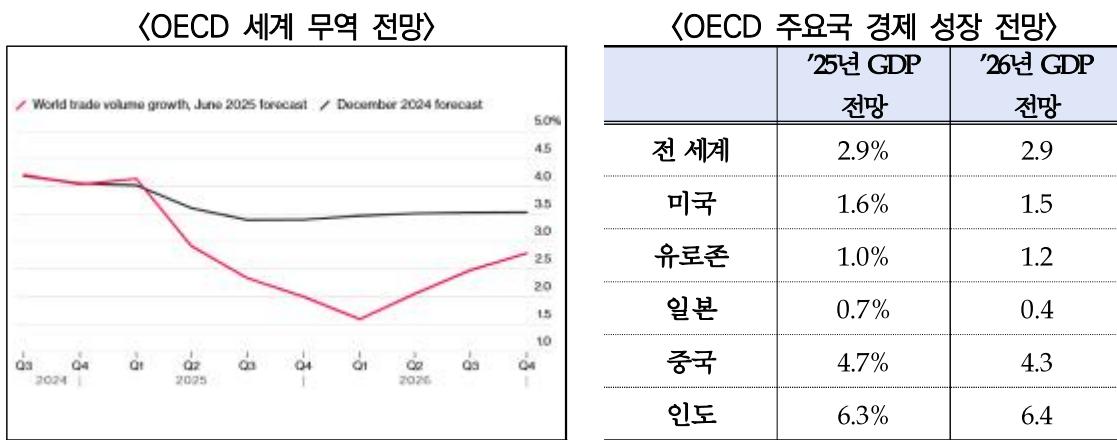
(경제) 미국 관세정책과의 연계 속 '25년 4월 수입·소비 동향 및 무역수지 변화

- (개요) 4월 수입 감소 및 소비 위축 속 무역수지 개선으로 관세정책 영향 주목
 - 미국 상무부는 4월 상품 무역 적자가 3월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배경에 대해 약 20%에 이르는 수입 급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
 - 4월에는 소비자 지출도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완화 흐름을 이어가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2% 물가 목표를 소폭 상회 하는 수준 기록
 - 언론은 4월 기준 통계를 인용하며,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인으로 평가
- (상세) 4월 수입 감소 및 소비 지출 위축 현상,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기조와 부합
 -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5년 4월 전체 상품 수입액은 약 2,762억 7,600만 달러로, 이는 전월(3월) 수입액인 약 3,426억 300만 달러 대비 19.4% 감소
 - 전월 대비 전 품목에서 수입 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소비재(-32.2%), 산업용품 (-27.4%), 자동차(-19.9%) 부문에서 두드러진 감소세 기록
 -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4월 주요 소비 지출 감소 항목으로는 비내구재(-59억 달러), 자동차·부품(-45억 달러), 의류·신발(-34억 달러), 오락·상품(-31억 달러) 등이 포함
 - 자산운용사 찰스 슈왑(Charles Schwab) 투자 전략가는 소비 지출 감소가 경제 둔화의 신호일 수 있으나, 견조한 임금 상승세로 이를 경고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
 - 증권사 SMBC 닛코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폴리티코(5.30), 미국 통계청(5.30),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5.30)

(경제) OECD,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개요) OECD, 통상 불확실성 확대로 '25년 세계 및 미국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 OECD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6.3.)'을 통해 미국의 관세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가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9%로, 미국은 2.8%에서 1.6%로 각각 하향 조정



[자료] OECD, 블룸버그 인용

- (상세) 정책 불확실성 및 공급망 제약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 OECD는 미국과 중국의 '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5%, 4.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통상정책 불확실성, 소비·투자 위축, 공급망 재편, 수출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 관세·비관세 장벽 확대 및 교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가 교역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글로벌 생산성 저하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전망) 정책 신뢰 제고 및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시
 - OECD는 통상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를 통해 정책 신뢰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중장기 성장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 고금리 지속에 따른 이자 부담 확대와 국방·기후·복지 등 구조적 지출 증가에 대응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조세 기반 확대의 필요성 강조

- | | |
|-------|----------------------|
|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 ■ 자료원 | OECD(6.3), 블룸버그(6.3) |

(규제) 미국, 중국산 드론 견제 및 미국 내 드론 산업 육성 위한 행정명령 추진

- (개요) 백악관, 중국산 드론 규제 및 미국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
 -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에서 중국산 드론(DJI, Autel 등) 규제와 미국 드론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복수의 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예정
 - 국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산업 시장점유율 회복, 첨단 상업용 드론 활용 확대 등 정책 목표 반영 전망
- (상세) 미 드론산업 투자 지원 강화 … 투명한 규제 및 심사 기준 마련이 중요
 - 행정명령 초안에는 FAA의 드론 비가시권(BVLOS) 비행 허용 규정 신속화, 주요 공장·발전소 시설 상공 비행 제한, 드론 수출 지원, 통신·보안 규제 강화 등 포함 전망
 - 중국산 드론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를 1년 내 완료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심사 미완료 시 FCC 통신망 사용을 자동 제한하는 NDAA(국방수권법) 조항도 시행 예정
 - 미국산 드론 제조업체(스카이디오, 브링크 등)에 대한 투자 확대, 상업용 드론 규제 완화, 수출 촉진 등 산업 생태계 육성책도 병행될 예정
 - 미국 상업용 드론 연합(Commercial Drone Alliance)은 “혁신·안보 양립 정책”이라며 환영 입장, BVLOS 등 규제 완화가 산업 성장의 전기 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들은 “중국산 저가 드론 의존도 축소와 미국산 드론 시장 확대, 보안 강화” 효과를 예상하는 한편, 규제·심사 기준의 투명성, 산업 현장 혼란 최소화를 과제로 지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폴리티코(5.30)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5.29)	H.R.3617 (하) (5.29)	John James (공)	〈미국 핵심 광물 공급 확보법 (Securing America's Critical Minerals Supply Act)〉 ▪ 에너지부 법을 개정하여 핵심 광물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급 확보 추진
원자력 개발 촉진 (5.29)	H.R.3626 (하) (5.29)	Byron Donalds (공)	〈원자력 개발 촉진 법안〉 ▪ 정부 차원의 원자력 협력 및 수출 전략 개발 촉진

* 미국 동부 시간 6월 3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Elon Musk Calls Trump Megabill a 'Disgusting Abomination' (머스크, “트럼프 감세안은 역겹고 끔찍해”)</p> <p>지난주 백악관을 떠난 머스크는 X를 통해 트럼프 감세안이 “거대하고 터무니 없으며 온갖 특혜성 지출이 가득한 돈낭비 법안”이라고 비판해. 레빗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머스크의 입장을 알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p>
The Washington Post	<p>Tallying Trump's online posting frenzy: 2,262 'truths' in 132 days ('SNS광' 트럼프...132일간 게시물 2,262개 기록)</p> <p>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32일 동안 트루스소셜에 2,262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집계돼. 이는 1기보다 3배 넘는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도와주는 보좌관 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p>
The New York Times	<p>After Trump Takeover, Kennedy Center Ticket Sales Fall Sharply (트럼프, 케네디센터 이사장 취임...매출 급감해)</p> <p>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4~5월 티켓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으며, 극장 수익도 82% 가량 감소해</p>
CNN	<p>Family of Colorado antisemitic attack suspect taken into ICE custody (ICE, 콜로라도 반유대주의 테러 용의자 가족 구금)</p> <p>지난 1일 콜로라도 볼더의 이스라엘 행사장에서 이집트 국적의 모하메드 솔리만이 반유대주의 화염병 테러를 일으킨 가운데,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용의자 가족을 구금했다고 전해</p>
USA Today	<p>How Trump tariffs make American manufacturers gr ate, not greater (트럼프 관세로 ‘위대하게’가 아닌 ‘위축되는’ 미국 제조업)</p> <p>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부흥이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관리연구소의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은 오히려 위축(-57%)된 것으로 분석돼</p>

* 미국 동부 시간 6월 3일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15	G7 재무장관 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현지 동향	2025.06월
US25-14	약가 인하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5월
US25-13	美 정기선 해운산업의 경제적 영향 및 항만료 추정 비용 분석 주요 내용	2025.05월
US25-12	2026 회계연도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5월
US25-11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4월
US25-10	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4월
US25-09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8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7	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	2025.02월
US25-06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5	美 하원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 상세 내용 및 시사점	2025.02월
US25-04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2025.02월
US25-03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2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	2025.02월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0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2 (2025.5.13.)		
코인사-21 (2025.2.8.)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1) 202-857-7919
	jwshim@kotra.or.kr	

◆ 2025년 산업부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6.5)



□ 모집개요

- 사업 목적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위기 대응 긴급 지원
- 모집규모 : 약 0000개사
- 모집 대상 : 무역 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5.05.16(금)~2025.6.5(목) 18:00 까지
- 문의처
- 홈페이지 게시판 (커뮤니티>문의하기) 온라인 문의 및 아래 참조

구분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해당 사업' 선택 후 작성
	통합안내센터	02-6004-840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02-6004-8400
	중소기업지원플랫폼 관련 (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 증빙 발급)	02-3771-1050